

# 경제·안보 전략적 대화채널 복원 ‘한반도 비핵화·대만 문제’ 시각차

## 韓中 정상회담 성과

양국 정상, 정기적 회동 공감대  
李 대통령, 핵잠수함 도입 입장 설명  
한한령 해제 ‘점진적·단계적’ 접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샤오미’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연출했다. ‘관계회복’에 중점을 맞췄던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다만 한중이 각자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북핵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의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한중 양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뜻다 나눈 대화를 이어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한중은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소통이나 협한·협정서 해소를 위한 민간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만찬을 마친 뒤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고 있다.

/뉴스스

경제적인 성과도 있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중 간 협력이 과거 제조업 중심의 단순한 구조에서 서비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같은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핵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미 원자력 협

정 개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한령이 있나 없나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대화도 있었다”며 “서로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주석 역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적극적인 자리를 얻어내지 못했다.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리창 총리 “한중 협력 범위·깊이 확대”

» 1면 ‘리창 만난 후…’서 계속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환영하며 전날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간 협력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또 리 총리는 “경제를 진작하고

민생을 촉진하는 것은 정치를 실시하는 첫 번째 임무로서 작년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래 그 적극적인 성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시종일관 대(對)한국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고, 중한

관계 우호를 전제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하면서 양국 관계는 올바른 궤도에 따라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동해 협력의 범위, 그리고 깊이를 확대하면서 양국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며 “이 대통령님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서예진 기자

##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통시장 진흙탕 싸움 정부, ‘현장점검’ 칼 빼다

통신사 ‘현금살포’ 수준 경쟁 이어져

방미통위 “소비자 피해 면밀히 감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양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소집한 데 이어, 다음 주 현장점검에 나선다. 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비방 광고와 막대한 보조금 살포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시장 질서가 한계를 넘어서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6일간 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한 통신사 간 경쟁은 ‘현금살포’ 수준으로 격화됐다. 이를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출

고가 129만 원인 아이폰 17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할 때 기기값 0원을 넘어 소비자에게 12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명 ‘차비 마케팅’이 등장했다. 갤럭시 S25 역시 번호이동 시 최대 45만 원의 페이백이 제시되는 등 단말기유동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낮은

시세가 형성된 상태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비방 마케팅도 임계치를 넘었다. 일부 대리점 전면에는 “다 털린 KT 못 써, 안전한 XX으로 이동”, “KT 고객님 위험!” 등 경쟁사의 보안 이슈와 해킹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내걸리고 있다. KT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기기변경 고객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책정하며 ‘수성’에 나섰지만, 몰려드는 번호이동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실제로 이탈 고객의 70% 이상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재가입 혜택을 강화한 SK텔레콤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다음 주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와 지역·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됐더라도 거주 지역이나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재경부 “이번 주중 국방부 예산 처리”

국방비 미지급 논란… “연말집행 영향”

일부 세출 소요가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불거진 정부의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이번 주내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재경부(舊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1조 3000억 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불용(쓰지 않은 예산) 규모가 줄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한 틈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그 이듬해 1월 중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 회계 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도 세입을 기반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 중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집행이 지연된 소요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